

국 어

1.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너나 없이 생활이 바쁘다.
- ② 남의 일에 함부로 알은 체 하지 마라.
- ③ 하도 사정하는 바람에 마지 못해서 들어주었다.
- ④ 보잘 것 없는 수입이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 ⑤ 지난 계절은 유달리 무척이나 더웠다.

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한라산의 제일 높은 봉오리에 올랐다.
- ② 내가 읽던 책을 거저 줄 테니, 너 공부나 열심히 해.
- ③ 커튼을 걷어 제치니,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 ④ 손바닥만 한 밭떼기에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형편이다.
- ⑤ 셔츠 위에 잠바를 윗옷으로 걸쳤다.

3. 다음 중 표준어의 개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① 눈엣가시, 석박지, 뒷꿈치, 돌맹이 <1개>
- ② 이쁘다, 마실, 복숭아뼈, 창란젓 <3개>
- ③ 걸판지다, 움츠리다, 마늘쫑, 주구장창 <3개>
- ④ 골차다, 끄적이다, 푸르르다, 손주 <2개>
- ⑤ 새치름하다, 누레지다, 빼진, 개기다 <3개>

4. 다음 중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 냄새 훈훈히 감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삼동이 하이얏다.

- ㉠ ㉡ ㉢ ㉣
- ① 障壁 風說 冊力 三洞
 - ② 障壁 風雪 冊歷 三冬
 - ③ 障壁 風雪 冊曆 三洞
 - ④ 腸壁 風雪 冊曆 三冬
 - ⑤ 腸壁 風說 冊歷 三洞

5. 다음 중 합성어로만 이루어진 것은?

- ① 밤낮, 새해, 나뭇잎, 돌보다, 똑같다
- ② 군불, 짓밟다, 헛고생, 돌배, 빛나다
- ③ 산비탈, 해맑다, 밤하늘, 치솟다, 먹히다
- ④ 앞뒤, 작은아버지, 터럭, 갈림길, 하루하루
- ⑤ 풋고추, 톱질, 잡히다, 높푸르다, 올벼

6.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위스러워서 아무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가 사지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곱단이를 과부 안 만들려는 그의 깊은 마음을…….
 - 사위스럽다: 마음에 불길한 느낌이 들고 꺼림칙하다.
- ② 창백한 꽃들은 애잔하게 고개를 쳐들며 혹은 엷게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고…….
 - 애잔하다: 몹시 가냘프고 약하다.
- ③ 달포 전에 보았을 때보다 아들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
 -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 ④ 식량이 연맥(燕麥) 아니면 마령서(馬鈴薯)인데, 날마다 수용하는 다량의 이것을 대기고 으깬은 도저히 인력으로 당할 바 아니요…….
 - 대기다: 애벌 짙은 수수나 보리 따위를 물을 조금 쳐 가면서 마지막으로 깨끗이 찧다.
- ⑤ 먹던 대궁을 주워 모아 찐지 쪽하고 갖다 주니 감지덕지 받는다.
 - 대궁: 나물의 줄기 한가운데에 있는 연한 심

7.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의 외래어 표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바베큐(barbecue) 장소
 ㉡. ㉡다이내믹(dynamic)한 공연
 ㉢. 영국의 ㉢옥스포드(Oxford) 지역
 ㉣. 중국의 무술인 ㉣쿵푸(<중>功夫[gōngfu])
 ㉤. 생일 축하 ㉤케이크(cake)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8. 시적 화자의 심경이 <보기>와 가장 먼 것은?

— <보 기> —

옹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비뚜루 선 장명등,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놈은 루바쉬카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삐쩍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에 흐느끼는 불빛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놈의 머리는 비탈은 능금
또 한 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오오 쾌럿[鸚鵡] 서방! 곧 이브닝!’
‘곧 이브닝!’(이 친구 어떠하시오?)

울금향 아가씨는 이 밤에도
경사 커튼 밑에서 조시는구려!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희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오오, 이국종 강아지야
내 발을 빨아다오.
내 발을 빨아다오.

- ① 五百年 都邑地를 匹馬로 돌아드니
山川은 依舊하되 人傑은 간 데 없다
어즈버 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② 興亡이 有數하니 滿月臺도 秋草로다
五百年 王業이 牧笛에 부쳤으니
夕陽에 지나는 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③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蓬萊山 第一峰에 落落長松 되어 있어
白雪이 滿乾坤할 제 獨也靑靑하리라
- ④ 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들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며 밤길 예눗다
- ⑤ 仙人橋 나린 물이 紫霞洞에 흘러들어
半千年 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희야 故國興亡을 물어 무엇 하리오

9. 다음 글에서 소개한 조선 시대 부동산 매매 절차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 시대에는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국가에서 관리하였는데, 국가에서 허용하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거래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조선 시대 부동산 매매의 합의와 인도는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매매시에는 신문기(新文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매도인은 구매인에게 신문기와 함께 토지의 권리전승을 증명하는 구문기(舊文記)도 함께 인도해야 했다. 구문기가 없을 경우 관청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입안(立案)이나 입지(立旨)를 발급받아야 하며, 구두계약의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문기를 작성해야 했다. 또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문기에 초가(草家)/와가(瓦家)의 여부와 집의 규모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0일 이내로 관아에서 매매 사실을 공증 받아야 했는데, 경국대전을 통해 입안의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매매를 공증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 증인, 서류를 작성하는 필집(筆執), 친족이나 인근 주민 2-3명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 구매인이 관청에 입안을 신청하면 매도인, 증인, 필집의 확인을 거친 후 관인을 찍어 거래 내용을 공증하였다.

또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관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전(稅錢)으로는 종이를 냈다. 기와집의 경우 1간 당 백지 1권, 초가는 1간 당 백지 10장씩 내도록 하였으며, 부동산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금으로 납부하는 종이의 양은 최고 20권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 같은 부동산 매매 관리 제도는 오랜 시간동안 이중매매, 위조문기의 방지 등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수정되며 확립되어왔다. 그러나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인해 관청의 증명 없는 백문매매(白文賣買)가 성행하였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문기가 대량 소실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법안은 점차 사문화되었다.

- ① 문기를 작성할 때에는 주택의 유형과 규모도 적는다.
- ② 매매 서류의 작성자는 매매의 보증인으로도 참여해야 한다.
- ③ 부동산 거래 후 관아에서 진행되는 공증은 법으로 정해진 형식에 따른다.
- ④ 30간 규모의 기와집을 거래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백지 30권이다.
- ⑤ 이전의 거래 내용이 기록된 문기가 소실됐을 경우 관아에서 입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10. 다음 중 (가)~(라)의 연결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산은 방대한 자료를 집적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내는데 특별한 솜씨가 있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자신의 방법을 실험하여 스스로 깨닫게 했다. 다산식 종핵과즐법의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가) 예를 들어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는다고 치자. ‘조를 마치고 길에 올랐다.’라는 한 구절을 보고, “조가 뭐니까?” 하고 물으면, 선생님은 “전별할 때 지내는 제사다.”라고 하실 것이다. “하필 할아버지 조 자를 쓰는 것은 어째서인가요?”라고 물으면, 선생님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겠지. 그런 뒤에 집에 돌아오거든 사전을 뽑아다가 조 자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자. 또 사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으로 옮겨가 그 풀이와 해석을 살펴, 뿌리를 캐고 지엽을 모은다. 또 『통전』이나 『통지』, 『통고』 등의 책에서 조 제 지내는 예법을 찾아보고, 한데 모아 차례를 매겨 책을 만든다면 길이 남는 책이 될 것이다.

(나) 내가 수년 이래로 자못 독서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저 읽기만 하면 비록 하루에 천번 백번을 읽는다 해도 안 읽은 것과 같다. 무릇 독서란 매번 한 글자라도 뜻이 분명치 않은 곳과 만나면 모름지기 널리 고증하고 자세히 살펴 그 근원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차례차례 설명하여 글로 짓는 것을 날마다 일과로 삼으라. 이렇게 하면 한 종류의 책을 읽어도 겉으로 백 종류의 책을 함께 들여다 보게 될 뿐 아니라, 본래 읽던 책의 의미도 분명하게 꿰뚫어 알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주자의 공부도 다만 이와 같았다. 오늘 한 가지 사물을 궁구하고, 내일 한 가지 사물을 깨는 것도 또한 이처럼 시작하는 것이다. ‘격’이란 밑바닥까지 다 캐낸다는 뜻이다. 밑바닥까지 다 캐지 않는다면 또한 유익되는 바가 없다.

(라) 이렇게만 한다면 전에는 한 가지 사물도 모르던 네가 이 날부터는 조제의 내력을 훤히 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비록 큰 학자라 해도 조제 한 가지 일에 있어서만은 너와 다투지 못하게 될 테니 어찌 크게 즐겁지 않겠느냐?

- ① (가) - (나) - (라) - (다)
- ② (가) - (다) - (나) - (라)
- ③ (나) - (가) - (다) - (라)
- ④ (나) - (가) - (라) - (다)
- ⑤ (나) - (다) - (라) - (가)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재난은 기본적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며, 제아무리 긍정적인 효과와 가능성이 ㉠부수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유, 즉 재난 속에서 생겨났다는 이유로 그런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자각한 열망과 가능성은 너무도 강력해서 폐허 속에서도, 잿더미 속에서도, ㉡아수라장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재난을 환영하자는 게 아니다. 재난이 이런 선물을 창조하지는 않지만, 선물이 도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난은 사회적 열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창을 제공하며, 재난 시에 증명된 것은 평상시에도, 다른 특별한 순간에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회적 변화는 선택으로 생겨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회안전망이나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농업의 가치를 믿기에 협동조합에 가입한다. 하지만 재난은 선호에 따라 우리를 분류하지 않는다. 재난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스스로 생존하거나 이웃을 구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용감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비상 상황으로 우리를 던져 넣는다. 비관적인 상황에서 생겨나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우리가 사회적 ㉢유대와 의미 있는 일들을 열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즉석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커다란 보람을 안겨 준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만 우리의 경제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경제사회 구조는 이데올로기적이며,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철학을 담고 있다. 가진 자들을 위한 이 철학은 우리 모두의 삶을 결정하며, 뉴스에서 재난 영화에 이르기까지 대중매체가 ㉣확산시키는 통념으로 더욱 강화된다.

재난은 우리가 속한 사회의 건강과 사회의 정의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에게 유대가 필요하다. 게다가 유대는 목적의식과 직접성, 주체성뿐 아니라 기쁨까지 가져다준다. 재난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발견되는 놀랍고 날카로운 기쁨 말이다. 사람들의 증언은 모든 낙원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 용감하고 융통성 있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시민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도래를 막기 힘들 정도로, 낙원의 가능성은 목전에 와 있다. 만일 지옥에서 낙원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존 질서와 ㉤체제가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 덕분이다.

11. 위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난의 긍정적 효과
- ② 재난 발생의 사회적 원인
- ③ 경제구조와 재난의 관련성
- ④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재난 방지
- ⑤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본 재난의 참상

12. ㉠~㉤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① | 附隨的 | 阿脩羅章 | 留待 | 擴散 | 體裁 |
| ② | 附隨的 | 阿修羅場 | 紐帶 | 擴散 | 體制 |
| ③ | 付隨的 | 阿脩羅章 | 留待 | 擴散 | 體制 |
| ④ | 付髓的 | 阿修羅場 | 紐帶 | 擴散 | 體裁 |
| ⑤ | 付髓的 | 阿修羅章 | 紐帶 | 擴散 | 體制 |

13.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방 생각보다 많이 넓네[널레].
- ② 그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숙맥[승맥]이다.
- ③ 이 영화에서는 빛의 효과[효 : 과]로 주제를 부각시켰다.
- ④ 그들의 화려한 공약은 속임수[소김수]에 지나지 않았다.
- ⑤ 그는 알약[알락] 서너 알을 입 안에 털어 넣고 물을 마셨다.

14.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관형사가 아닌 것은?

- ① 부모에게 불효하는 고안 녀석 같으니라고.
- ② 남편을 기다리며 이렇게 하고많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 ③ 긴긴 세월을 인내하며 노력해 왔다.
- ④ 그 사람은 서울에서도 한다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 ⑤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15.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똥자리, 웃어른, 얼핏’처럼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 ② ‘깨끗이, 버젓이, 정확히, 솔직히, 도저히’처럼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③ ‘소쩍새, 해쓱하다, 움짙’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만, ‘씩둑, 갑자기, 깎두기’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 ④ ‘해돋이, 같이, 견히다’처럼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꽃을, 꽃이, 꽃밭’으로 적고 글자 그대로 읽는다.

16. 다음 <보기>의 밑줄 친 ㉠~㉣ 중 표준어를 모두 고르면?

— <보 기> —

㉠. 너는 시험이 코앞인데 ㉠맨날 놀기만 하니?

㉡. 당신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면서도 ㉡판청을 붙이시는군요.

㉢. 아버지의 사랑방에는 밤이면 밤마다 ㉢마을꾼들이 모여들었다.

㉣. 총소리에 그는 얼마나 급했던지 옷도 ㉣가꾸로 입고 밖으로 나왔다.

㉤. 형은 사정없이 구둣발로 그 사람을 ㉤조져 대더니 막판에는 돌맹이를 집어 들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17.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소에도 우리 부서의 과장님께서서는 골치 아픈 일을 자칭해서 떠맡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번 일의 책임자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방안이 없다면 과장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 함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해 주십시오.

- ① ‘자칭해서’는 의미상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업무를 맡는다는 의미의 ‘자칭해서’로 고쳐 쓴다.
- ② ‘일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이므로 ‘일수’로 고쳐 쓴다.
- ③ ‘과반수 이상’은 의미의 중복 사용이므로 ‘반수 이상’으로 고쳐 쓴다.
- ④ ‘함으로’는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인 ‘~하는 것으로써’를 나타내므로 ‘하므로’로 고쳐 쓴다.
- ⑤ ‘조장’은 부정적인 일을 부추긴다는 뜻을 가지므로 ‘조성’으로 고쳐 쓴다.

18.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構築(구축)-看做(간주)-涉獵(섭렵)-叱責(힐책)
- ② 投擲(투적)-破散(파산)-拿捕(장포)-比較(비교)
- ③ 秋毫(추호)-未練(미련)-健康(건강)-不肖(불초)
- ④ 左遷(좌변)-未安(미안)-經營(경영)-知慧(지혜)
- ⑤ 呵責(가책)-究明(규명)-酷使(혹사)-常套(상투)

19. 다음 중 ㉠과 의미가 같은 것은?

나라말씀미 둥궈(中國)에 달아 문궈(文字)와로 서르 스궈미 아니홀씨 이런 전츠로 어린 빅성(百姓)이 니르고져 홀배 이셔도 므츄내 제 브들 시러 퍼디 몬 홀 노미 하니라. 내 이를 윈(爲)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들 궈(字)를 밍궈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뻥한(便宜)키 호고져 홀 산르미니라.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 ① 생각한 바를 정확하게 쓰는 일은 매우 어렵다.
- ② 나 정말 괜찮으니까 그 일에 신경 쓰지 마.
- ③ 농사에 퇴비를 쓴 결과 수확량이 늘어났다.
- ④ 바람이 잘 통하고 양지바른 곳을 뿔자리로 썼다.
- ⑤ 웃놀이는 말을 잘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20. 다음 밑줄 친 '-고'의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일년초도 적당한 간격으로 속아 줘야 하고 심지 않았는데도 건강하게 영역을 넓혀가는 머위, 돋나물 등 식용할 야채를 거두기도 한다.
- ② 열 손가락을 하늘 향해 높이 쳐들고 도심의 변화가를 확보하는 유쾌하고 엽기적인 늙은이를 상상해 본다.
- ③ 매해 보는 거지만 5월의 신록은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고 눈부시다.
- ④ 마음을 씻고 나서 그래도 몸담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일도 대강은 알아둬야 할 것 같아 신문을 펴 든다.
- ⑤ 한결같이 몽실몽실 부드럽고 귀여운, 꼭 아기 궁둥이 같은 게 오월의 나무들이다.

2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너리같이 보이지 않게 노력해야 해.
→ 버릇이 없는 사람
- ② 책상 위의 서류 더미들을 간중그렸다.
→ 흐트러진 일이나 물건을 가지런하게 하다.
- ③ 그의 말이 짜장 헛된 이야기만도 아닌 셈이었다.
→ 과연 정말로
- ④ 이야기 들은 값으로 술국이나 한 뚝배기 안다미로 퍼 오너라.
→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 ⑤ 그녀는 바람만바람만 그의 뒤를 따랐다.
→ 바라보일 만한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22. 다음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원전 5세기 경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물의 변화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요소가 물이며, 따라서 물이 사물을 구성하는 근원 요소라고 본 것이다. 이후 수많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자연을 구성하는 근원 요소와 그 형태의 변화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기원전 4세기경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의 근원 요소로 불, 공기, 물, 흙이라는 4원소를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4원소의 관계를 결정하는 두 가지 힘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나누는 힘(미움)과 묶어주는 힘(사랑)이다. 즉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불변적이며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4원소가 두 가지 힘에 따라 나뉘고 합쳐지며 사물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엠페도클레스와 비슷하거나 조금 늦은 시기,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주에는 오직 단 한 가지 유형의 근원 요소가 존재한다. 이 요소들은 더 이상 분리가 불가능한 작은 입자들인데, 이 입자들이 '원자'이다. 원자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 지각이 불가능하며, 원자의 운동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 기계적 충돌이 때때로 원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이루게 하는데, 이렇게 원자들이 서로 뭉치면 사물이 구성된다. 반대로 한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서로 떨어져나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물은 해체된다. 달리 말하면 우주는 그 다채로움과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수의 미세한 입자들이 빈 공간 속을 돌아다니며 충돌에 의해 위치 변화가 결정되는 거대한 당구 게임과 같은 것이다.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은 엠페도클레스의 주장과 여러모로 대비된다. 근원 요소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눈 엠페도클레스와 달리 데모크리토스는 단 한 종류의 근원 요소를 제시하였다. 또한 엠페도클레스가 사물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을 주장한 것에 반해, 데모크리토스는 근원 요소들의 기계적 충돌과 위치 변화만으로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오늘날의 화학 이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지만, 당시에는 자연에 관한 여러 이론과 주장들 중 하나로 취급되었다.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은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원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데, 원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러나 원자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실험은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원자론은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실험적 자연과학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① 여러 이론가들의 주장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② 특정 이론가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드러낸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실제 현상을 제시한 후 그 배경 원리에 대한 여러 이론가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여러 이론가들의 이론을 설명하고 각각의 이론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서로 상반되는 이론가들의 주장을 대조한 후 이를 절충하여 새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23. 다음 중 <보기>가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데카르트나 칸트 모두 그렇게도 투명한 이성에 의한 보편적 사고를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사고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전통에 짙게 물든 지역적인 것이었다.

(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에 안간힘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우리가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문물은 삶의 조건을 향상시켜 주는 일에 실로 많은 기여를 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기아와 빈곤에서 벗어나 물질적 풍요를 맛볼 수 있게 되었고, 미신과 억압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구의 문물을 참으로 몰주체적으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숭배해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사상과 문화는 돌보지 않고 암매장하듯 내팽개쳐 두었다.

(나) 우리는 서양 것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기에 급급했지 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학문이 지구의 다른 구석에서도 보편으로 숭배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에서 보편이라고 인식되고 교육되는 서구문화의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지역적인 것인지 곧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편이라고 여기는 데 추호도 의심을 품지 않았으며, 역으로 우리의 학문과 사상을 지역적인 것으로 치부해 왔다.

(다) 문화 각 영역에서 드러나는 사대주의적 혹은 종속주의적 현상은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철학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땅에서는 철학이라고 하면 곧 서양 철학만 가리키고, 동양철학은 철학이 아니라고 폄하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한 영역에만 집중적으로 몰두할 수 있는 서양철학자와 달리, 동양철학자는 혼자서 한국철학과 중국철학 그리고 인도철학까지 다 소화해서 가르쳐야만 한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동양철학자들에게 쏟아지는 말이라고는 “도대체 철학적 소양이 없다”라는 식의 비판뿐이다.

(라) 많은 철학자들은 자국의 역사·문화·현실에 관한 이해가 결여된 자신을 타하기에 앞서, 일단 서구중심적 입장에서 스스로의 전통철학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기에 바쁘다. 제국주의 시기에 서구 이외의 문화를 연구하던 서구 학자들 역시 해석학적 동참의 노력도 없이 자신의 문화를 잣대로 서구 이외 지역의 문화에 대해 미개와 야만이라고 폄하해 왔음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편견에 물든 오리엔탈리즘의 사고를 서구로부터 받아들여 스스로없이 자신의 본토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 ① (가)의 앞
- ② (가)와 (나) 사이
- ③ (나)와 (다) 사이
- ④ (다)와 (라) 사이
- ⑤ (라)의 뒤

24.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턱상 빅옥경을 엇디호야 니별호고,
 히 다 더 저믄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얍죽혼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 시
 나도 님을 미더 군 뜨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태야 어즈러이 구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히니
 내 몸의 지은 죄 퇴기타 빠져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릅이라 허물호라
 설위 플터 헤니 조물의 타시로다.

(중략)

어와, 허스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브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이나 되야이서
 님 거신 창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크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 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대표적인 시조 문학이다.
- ② 지은이는 이 작품을 짓고 다시 대화체의 속편을 지었다.
- ③ 한자어와 고사가 덜 사용되고 진솔한 심정을 간절히 표현했다.
- ④ 3·4(4·4)조의 4음보 연속체이며 서사와 본사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 ⑤ 버림받은 여인의 처지를 체념과 절망의 독백조로 읊고 있다.

2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嬰兒)를 삼킨 곳.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水深)을 모른다.

- ① 남북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비극을 다루고 있다.
- ② 의도적인 행갈이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절제된 시어와 간결한 시행으로 감정을 응축하고 있다.
- ④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헌 법

1.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8년 헌법은 근로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가족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다.
- ② 1952년 제1차 헌법개정은 사전공고절차를 결여하였음은 물론 독회·토론도 없이 의결한 점에서,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은 의결정족수의 미달인 점에서,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은 민의원 및 참의원에서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상의 국민투표로만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 ③ 1960년 제3차 헌법개정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 ④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을, 1980년 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환경권을, 1987년 헌법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⑤ 1987년 헌법 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2.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직장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 ③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④ 특별한 조약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할 의무가 없으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의 자유가 없다.
- ⑤ 태아도 원칙적으로 생명권의 주체이고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자궁에 착상하기 전 혹은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태아에게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 큰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용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ㄷ.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규정은 이에 대해 폭넓은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ㄹ.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므로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 ㅁ. 전면적·확실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으며, 개정된 현행법은 3년 이상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 ① ㄷ, ㄹ
- ② ㄷ, ㅁ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ㅁ
- ⑤ ㄴ, ㄷ, ㄹ, ㅁ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되어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
- ②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의료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 ④ 일정한 표현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일정한 내용의 표현물의 제작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문제뿐만 아니라 알 권리의 제한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 ⑤ 방송사업허가제는 방송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표현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사전봉쇄 내지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에 해당한다.

5.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부실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
- ② 학원·교습소·대학(원)생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
- ③ 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장기 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④ 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의 개최 이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
- ⑤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하는 것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인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 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ㄷ.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ㄴ. 학원설립·운영자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 ㄷ.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결격조항은 각종 규율의 형해화를 막고 학습자를 보호하며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ㄹ. 정원제로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인이 주관적인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상황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ㅁ.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ㅁ
- ⑤ ㄷ, ㄹ, ㅁ

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민과 외국인, 사법인과 공법인을 불문하고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 ③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 ④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9. 현행 「국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주어진 조건 내지 상황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음)

<보 기>

- ㄱ. 국회의장 갑(甲)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 ㄴ. 국회의장 갑(甲)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였다.
- ㄷ. 국회의원 을(乙)은 연석회의에서 의견교환 후 표결을 하였다.
- ㄹ. 국회의원 병(丙)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면서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ㅁ. 국회의장 갑(甲)은 본회의 중 출석의원이 재적의원의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자 산회를 선포하였다.

- ① ㄱ, ㄹ
- ② ㄴ, ㅁ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10.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장래의 선거에서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부재자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특성과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할 때, 부재자투표소 투표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다.
- ②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경우 장차 그 합격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는 것이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의 요건은 갖춘 것이다.
- ③ 혼인을 앞둔 예비신랑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는 않으나, 결혼식 때에는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을 접대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령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법령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사실상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⑤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군법무관들은,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1.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되어온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의 요구도 하지 않으므로써 확정된 법률이나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되지 아니하면, 법률은 공포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 ㄴ.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ㄷ. 헌법재판소는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절차상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미한 위반이 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ㄹ.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이면 국회에 환부하는 기간인 15일은 차기 국회 개회일까지 정지된다.
- 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은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 ① ㄱ, ㄷ, ㄹ
- ② ㄴ, ㄷ, ㅁ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ㄴ, ㄷ, ㄹ, ㅁ

12.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선거관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제6항 소정의 규칙 제정권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다.
-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협조요구를 받은 공공단체 및 개표 사무종사원을 위촉받은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은 우선적으로 그에 응하여야 한다.
-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도 가진다.

13. 갑(甲)은 현재 미국 뉴욕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은 물론 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상 갑(甲)이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ㄱ. 대통령선거권
- ㄴ.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
- ㄷ.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권
- 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
- ㅁ. 국민투표권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14.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2조 제6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군경의 유가족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②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다.
- ③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가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 ⑤ 6월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15. 평등권(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동순위자인 다른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②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 1/3%,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③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련 규정에서 2014. 1. 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할당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35세 이상된 사람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④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은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 사회적 상황과 법감정, 범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치과전문의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16.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 ③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 ⑤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

17.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하급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반드시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심판제청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므로 조약과 긴급명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폐지된 법률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군사법원도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가진다.
- 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당해 소송에 관한 일체의 절차가 정지된다.

18.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의 근거를 헌법상의 법치주의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고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소액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그 금액의 50배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③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하는데, 자격제도에 있어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 ④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음반을 제작하기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 ⑤ 헌법재판소는 복수의 축산업협동조합 간의 경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여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조합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본다.
- ② 헌법상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면서 양자 가운데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에 더 비중이 두어진다고 보고 있다.
-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사회보장수급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본다.

20.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 ③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범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 ④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1.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 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생 정원 조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
- ②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도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있다.
- ③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지를 판별함에 있어서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22. 헌법재판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본 것은?

- ①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계획의 내용·처분 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 ②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 동안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위가 「공정거래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 ③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사유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항
- ⑤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23.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보 기> —

- ㄱ. “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재량으로 방청불허 결정을 할 수 있다.
- ㄴ. 일사부재의원칙은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게 하는 원칙으로 헌법상 명시되어 있다.
- ㄷ. 우리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ㄹ. 국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기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국회의 상설화는 가능하다.
- ㅁ. 중요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ㅂ.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 회의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① ㄱ, ㄷ, ㅁ
- ② ㄱ, ㄹ, ㅂ
- ③ ㄴ, ㄷ, ㅂ
- ④ ㄷ, ㄹ, ㅁ
- ⑤ ㄷ, ㄹ, ㅂ

24.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② 상급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 ③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법관의 양형선택권과 판단권을 제한하므로 위헌이다.
-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⑤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급심의 법률상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 판단에는 기속되지 아니한다.

25.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유선거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당연한 원리이다.
- ②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는 1인 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제는 선거권자의 투표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선거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언론사가 출구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입후보에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고귀속비율을 정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⑤ 집행유예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경 제 학

1.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가격소비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수요곡선은 우하향할 수 있다.
 ㄴ. 동일한 수요곡선상에 있는 서로 다른 재화묶음을 소비하더라도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은 동일하다.
 ㄷ. 우상향하는 앵겔곡선은 해당 재화가 열등재임을 의미한다.
 ㄹ. 소득소비곡선과 앵겔곡선의 기울기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의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
 ㅁ. 수요곡선은 대체효과의 절대값이 소득효과의 절대값보다 클 경우에 우하향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이자·지대 등의 요소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다.
- ②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한 나라의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생산지표임에 비하여,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소득지표이다.
- ③ 국민소득(national income, NI)은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NNI)에서 간접세를 빼고 정부의 기업보조금을 합한 것이다.
- ④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작성한다.
- ⑤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는 파셰(Paasche)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3.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현재의 국내 실질이자율이 국제 실질이자율보다 낮다. 국제자본이동성이 완전한 경우의 먼델-플레밍 모형(Mundell-Fleming model)에 의할 때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순자본유입이 발생할 것이다.
 ㄴ. 순수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
 ㄷ. 실질이자율이 더 상승할 것이다.
 ㄹ. 외환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의 연금지급액이 200이었다면 2016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 X와 Y 두 재화만을 소비하는 연금수령자가 2015년 현재 $P_x = P_y = 1$ 에서 X와 Y를 각각 100단위씩 소비하고 있다.
- 연금수령자의 효용함수는 $U(X, Y) = \sqrt{XY}$ 이며 연금수령자는 매기 효용을 극대화 한다.
- 2016년에는 P_y 는 그대로인데 $P_x = 1.1$ 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연금지급액을 조정한다.

- ① 연금수령자가 이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액이 220으로 증가해야 한다.
- ② 연금지급액이 200에서 213으로 증가할 경우 연금수령자는 이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선택할 것이다.
- ③ 연금지급액이 200에서 220으로 증가할 경우 연금수령자는 이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선택할 것이다.
- ④ 연금수령자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16년에는 107이 된다.
- ⑤ 연금수령자가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액이 200과 210 사이의 값으로 증가해야 한다.

5.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을 올리면 기업의 매출액은 감소한다.
 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의 판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재화의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ㄷ. 어떤 재화의 구매자에게 종량세가 부과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한다.
 ㄹ. 대체재가 적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ㅁ. 매달 10kg의 사과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6. 화폐수량방정식에 따른 화폐수량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출량은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 ②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 ③ 통화량의 증가는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유통속도는 증가한다.
- ⑤ 통화량을 급속히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진다.

7. <보기>와 같은 노동시장에서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 균형이 성립하고 기업이 위험중립적이라고 할 때 p 의 값은?

—<보 기>—

- 노동시장에 두 가지 유형 A와 B의 노동자들이 각각 p 와 $1-p$ 의 비율로 존재한다.
- 기업은 유형 A에 대해서는 15의 임금을, 유형 B에 대해서는 5의 임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 기업은 노동자의 유형을 알지 못한 채 모든 노동자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한다.
- $p = \frac{w}{20} - \frac{1}{10}$ (단, w 는 임금)

- ① 0.1 ② 0.3 ③ 0.5 ④ 0.6 ⑤ 1

8.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지출이 100만큼 증가하는 경우 IS-LM 균형에 의해 변하는 GDP 값 중 가능한 값은?
(단, 승수효과 > 구축효과 > 0)

—<보 기>—

-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가진다.
-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0.5이고 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① 0
② 100
③ 200
④ 250
⑤ 300

9. 자본재 가격이 일정할 때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
(단, 할인율은 일정하다.)

- ① 자본의 한계효율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② 자본의 한계효율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③ 자본의 한계효율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진다.
④ 자본의 한계효율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진다.
⑤ 자본의 한계효율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10. 페인트 산업은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인근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 페인트 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페인트 생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 페인트 한 통당 부과하는 피구세는 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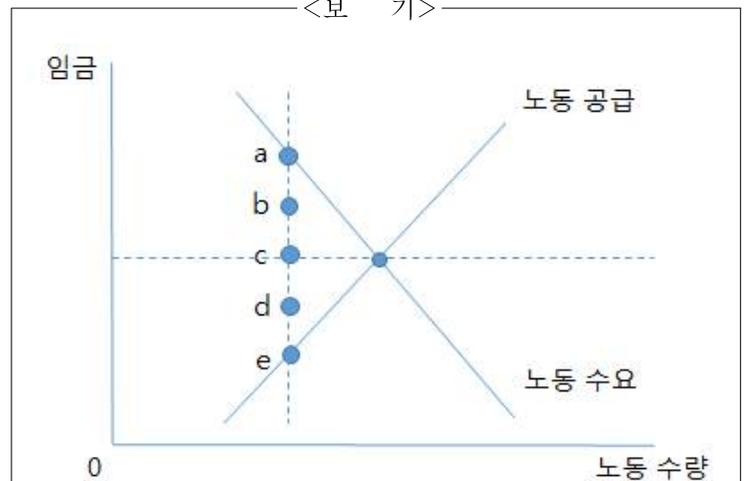
—<보 기>—

- 페인트 산업은 완전경쟁시장이다.
- 페인트 산업의 한계비용은 $MC=10Q + 10,000$ 이다.
- 페인트 산업의 한계피해액은 $SMD=10Q$ 이다.
- 주어진 가격에 대한 페인트 산업의 시장수요는 $Q=-0.1P + 4,000$ 이다.

- ① 5,000
② 7,000
③ 10,000
④ 20,000
⑤ 30,000

11.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곡선과 노동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보기>의 그래프와 같이 서로 동일하다.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4대 보험료를 반반씩 나누어 부담시킬 때, 노동시장에서의 균형 급여수준과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실질임금수령액을 모두 적절히 표시한 것은?

—<보 기>—



• 4대 보험료의 크기는 점a와 점e의 간격에 해당하고 점a와 점b, 점b와 점c, 점c와 점d, 점d와 점e의 간격은 모두 같다.

- ① 균형 급여수준: a, 실질임금수령액: c
② 균형 급여수준: c, 실질임금수령액: c
③ 균형 급여수준: c, 실질임금수령액: e
④ 균형 급여수준: d, 실질임금수령액: e
⑤ 균형 급여수준: e, 실질임금수령액: e

12. 총수요(AD)-총공급(AS)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AD-AS곡선은 모든 상품의 개별적인 수요-공급을 수평으로 합하여 얻어진다.
 - ㄴ. 실제물가와 예상물가 수준이 같으면 총공급곡선은 자연실업률하의 국민소득수준에서 수직이다.
 - ㄷ.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므로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ㄹ. 노동공급의 결정에 있어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에 임금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항상 상쇄된다면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ㅁ.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IS곡선이 가파르고 총수요곡선이 가파르다.
 - ㅂ.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우 총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ㅂ
- ⑤ ㅁ, ㅂ

13. A국은 기준금리를 유지하였는데 B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을 때 A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A국 경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① 자본 유출 발생
- ② 환율의 상승(국내통화의 평가절하)
- ③ 무역수지의 개선
- ④ 자본수지의 악화
- ⑤ 고용의 감소

14. 개방경제하에서 단순 케인지안 거시경제모형의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더니 <보기>와 같았다. <보기>에 나타난 거시경제 정책이 균형국민소득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독립적 소비지출: 20조원
 - 독립적 투자지출: 150조원
 - 독립적 정부지출: 200조원
 - 조세수입: 200조원
 - 독립적 수출: 160조원
 - 독립적 수입: 30조원
 - 한계소비성향: 0.8
 - 한계수입성향: 0.2
 - 정부는 재정지출을 30조원 늘리기로 하였다.
 -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독립적 수출은 17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 소득세는 존재하지 않고 정액세만 존재한다.

	균형국민소득	경상수지
①	100.5조원 증가	5.5조원 악화
②	112.5조원 증가	변동없음
③	110.5조원 증가	변동없음
④	112.5조원 증가	7.5조원 악화
⑤	110.5조원 증가	3.75조원 악화

15. 점수투표제란 투표자가 각 대안에 대해 자신의 선호 정도를 점수로 표시하여 투표하고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보기>의 표는 각 투표자가 10점을 후보 A, B, C에 대한 선호에 따라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보 기>

- 투표자1~투표자5는 진실하게 자신의 선호를 표시하여 투표에 임한다.
- 투표자6은 다른 투표자들의 점수 배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 투표자6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자 전략적 행동을 취하여 투표에 임한다.

	투표자1	투표자2	투표자3	투표자4	투표자5	투표자6
후보 A	3	3	3	1	7	2
후보 B	6	4	5	7	0	1
후보 C	1	3	2	2	3	7

- ① 후보 A
- ② 후보 B
- ③ 후보 C
- ④ 후보 A와 후보 C 모두 가능
- ⑤ 세 후보 모두 가능

16. 보몰(W. Boumol)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거래적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 ㄴ. 한 번에 인출하는 금액이 커지면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 ㄷ. 화폐수요에 있어서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한다.
- ㄹ.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 ㅁ. 한 번에 인출하는 금액이 커지면 화폐수요도 커진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ㄹ, ㅁ
- ⑤ ㄴ, ㄷ, ㅁ

17. <보기>와 같은 경제환경하에서 개인저축과 균형이자율(r^*)은?

<보 기>

- $Y = C+I+G$ · $T = 1,500$
 - $Y = 6,000$ · $C = 200+0.5(Y-T)$
 - $G = 3,000$ · $I = 1,000-40r$
-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지출, T는 조세, I는 투자지출,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이다. 이 때 r의 균형값인 균형이자율은 r^* 로 표시한다.)

	개인저축	균형이자율(r^*)
①	2,050	11.25
②	2,000	11.25
③	2,050	11.50
④	2,000	11.50
⑤	2,050	12.25

18.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비용함수가 $C(Q) = Q^3 - 6Q^2 + 19Q$ 이고, 현재 시장에는 15개의 기업이 생산 중에 있다. 시장수요곡선은 $Q = 70 - P$ 라고 할 때 장기에 이 시장에는 4개 기업이 추가로 진입한다.
- ㄴ. 수요곡선은 $P = -3Q + 80$, 평균비용곡선은 $AC = -Q + 60$ 인 자연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윤의 크기는 50이다.
- ㄷ. 쿠르노 모형(Cournot model)에서 각 기업은 상대방의 가격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격을 결정한다.
- ㄹ. 혼합전략을 허용하면 비협조적 게임에 있어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 항상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9. A, B, C 3인으로 구성된 경제상황에서 가능한 자원배분 상태와 각 상태에서의 3인의 효용이 <보기>와 같다. 다음 중 각 자원배분 상태를 비교했을 때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자원배분 상태를 모두 고르면?

<보 기>

자원배분 상태	A의 효용	B의 효용	C의 효용
가	3	10	7
나	6	12	6
다	13	10	3
라	5	12	8

- ① 가
- ② 나, 다
- ③ 가, 다, 라
- ④ 나, 다, 라
- ⑤ 가, 나, 다,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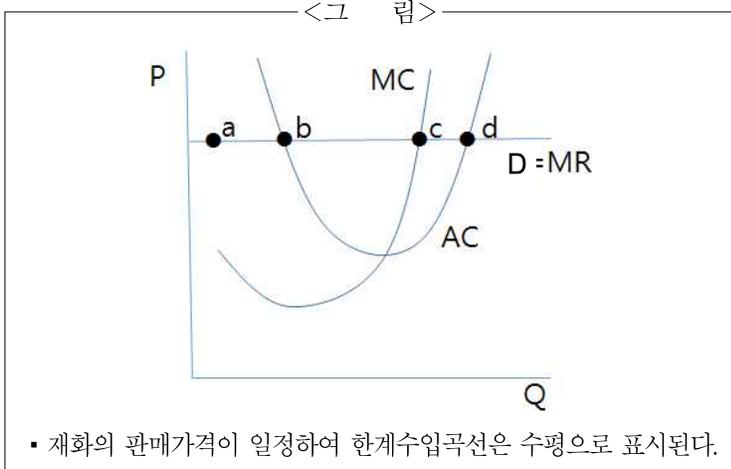
20. 방앗간에서 밀 3톤을 총 3만 달러에 수입한 뒤, 밀 2톤은 소비자들에게 팔아 총 3만 달러의 매상을 올리고, 나머지 1톤은 밀가루로 만들어 2만 달러를 받고 제과점에 팔고, 제과점에서는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3만 달러를 받고 소비자에게 팔았다. 이 때 국내에서 창출된 총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 ① 2만 달러
- ② 3만 달러
- ③ 6만 달러
- ④ 8만 달러
- ⑤ 9만 달러

21. 한 경제에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이 존재하고 부유한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은 가난한 계층의 한계소비성향보다 작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조세를 감면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난한 계층의 조세 감면을 크게 할수록 경기 부양효과가 크다.
- ② 조세 감면 총액이 커지면 경기 부양효과가 커진다.
- ③ 소득분포가 경기 부양효과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 ④ 가난한 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기 부양효과가 커진다.
- ⑤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의 차이가 작을수록 경기 부양효과가 커진다.

22. 아래 <그림>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기업의 단기에서의 한계수입(MR), 한계비용(MC) 및 평균비용(AC)을 표시한 그래프이다. 다음 중 각각의 생산량 수준인 점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해당 기업은 순익분기점인 점c의 생산량을 선택할 것이다.
- ㄴ. 점c에서 이윤이 최대가 된다.
- ㄷ. 점d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 ㄹ. 점a, b, c, d 중에서 점b의 순수익이 가장 크다.
- ㅁ. 점a, b, c, d 중에서 점a의 순수익이 가장 적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ㄱ, ㄴ, ㅁ ⑤ ㄴ, ㄹ, ㅁ

23. <보기>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어떤 보험회사가 개인A에게 100% 확률로 일정한 소비수준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개인A가 동의할 수 있는 소비수준의 최저값이 존재한다. 이 때 경제 내에 개인A와 같은 개인들이 무수히 많다면 보험회사가 받을 수 있는 개인당 보험료 수입의 최고값은?

<보 기>

- 개인A의 소비는 50%의 확률로 1, 나머지 50%의 확률로 4의 값을 가진다.
- 개인A의 효용함수는 $U(C) = \sqrt{C}$ 이다. (단, U 는 효용, C 는 소비)
- 모든 개인은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며, 각 개인들의 소비는 서로 독립적으로 실현된다.

- ① $\frac{1}{4}$ ② $\frac{1}{2}$ ③ $\frac{\sqrt{2}}{2}$ ④ $\frac{3}{2}$ ⑤ $\frac{7}{4}$

24. 폐쇄경제하에서 정액세만 있는 경우 균형재정승수의 값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 ㄱ. 정부지출의 증가가 조세의 증가에 의해 완전 상쇄되므로 국민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 ㄴ. 정부지출의 증가는 그 자체가 즉각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고 조세의 증가 또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총체적으로 국민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ㄷ. 정부지출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즉각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조세의 증가는 소비지출의 감소를 통해서만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ㄹ. 정부지출의 증가는 그 자체가 즉각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조세는 정부가 이를 거두어들이는 기간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 ㅁ.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조세가 2배로 증가하여 국민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균형재정승수

이유

- | | | |
|---|----|---|
| ① | 0 | ㄱ |
| ② | 1 | ㄴ |
| ③ | 1 | ㄷ |
| ④ | -1 | ㄹ |
| ⑤ | -1 | ㅁ |

25. 케인즈학파의 입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성립한다.
- ㄴ. 생산된 것이 모두 판매되기 때문에 수요부족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
- ㄷ. 가격이 경직적이고 충분한 정도의 유희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 전체 생산량은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 ㄹ. 모든 개인이 절약을 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 ㅁ.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ㅂ. 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
- ㅅ. 임금의 하방경직성, 화폐환상(money illusion)의 부재를 주장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ㄹ, ㅂ
 ⑤ ㄹ, ㅂ, ㅅ